

박근혜 대통령은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대신 친(親) 박근혜계 정치인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특사로 보냈다.

다만, 정부의 핵심 외교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북한 문제 협력에 러시아가 필수적인 파트너임을 고려해 고위급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했다. 푸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법무·검찰

### ■ 부정부패와의 전쟁... '방위사업비리' 의혹 등 전방위 수사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15년 핵심 국정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었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 잡고 예산 누수로 이어질 만한 각종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런 기조에 맞춰 전방위 사정 작업에 나섰다. 비리 첩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 수사가 표면화된 시점은 3월이었다.

수사는 동시다발적이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3월 11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이규태 회장을 체포하면서 첫 포문을 열었다.

방위사업청이 터키 무기업체로부터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거래를 중개한 일광공영이 장비 가격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1천억원대의 장비 구입 예산을 가로챘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3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벌였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비자금이 포스코그룹으로 흘러간 뒤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검찰의 조준선은 포스코그룹 전반의 비리에 맞춰져 있었다.

3월 17일에는 또 다른 방산 비리 의혹이 표면화됐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음파탐지기 납품 부실이 드러난 통영함 사건 때문이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합정사업부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부하 직원들이 통영함 납품 장비 시험평가서 등을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납품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총장이 소환된 이튿날인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경남기업이 석유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30억원의 융자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다.

3월 27일에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박 전 수석의 자

택과 중앙대, 교육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됐다.

총수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동국제강도 검찰의 사정권에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28일 동국제강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장세주 회장이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 ■ 前정권 비리 파헤치기 논란 속 '성완중 리스트' 수사

이 같은 검찰의 연쇄적인 수사는 전(前) 정부의 비리를 한꺼번에 털어내겠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박 전 수석 외에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정부와의 관련성이 큰 경우가 많았다.

포스코 비리 수사는 포항을 지역구로 둔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겨냥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남기업 수사도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낼 무렵 돌발 변수를 맞았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여권 인사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을 적은 메모 한 장('성완중 리스트')과 경향신문 기자에게 메모 내용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남겼다.

메모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인 이병기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권 유력 정치인의 금품거래 의혹을 담은 이 메모는 정국을 강타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4월 12일 수사에 착수했다.

7월 들어 '성완중 리스트' 수사는 마무리됐다. 메모 속 정치인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나머지 6명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서 '홍준표 1억'이라고 적힌 것과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16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흘러갔지만 의혹이 규명되는 사건들도 나왔다. 반산비리 합수단은 동영함 장비 부실 납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황 전 총장이 지시 내지 묵인하지 않고서는 납품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장세주 회장이 5월 2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돈 208여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지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범훈 전 수석 역시 검찰 조사결과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돼 5월 22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와 두산그룹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함께 드러났다.

## ■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용두사미로 끝나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주춤했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다시 불씨를 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1조원대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제기된 석유공사를 정조준했다. 인수 결정권자였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6월 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 석유공사는 당초 하베스트만 인수하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던 NARL까지 함께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NARL 인수에만 1조3천700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2014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서는 석유공사에 이어 광물자원공사가 검찰의 표적이 됐다.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고가에 매입해 공사 측에 11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다.

광물자원공사 김신중 전 사장은 7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앞서 조사를 받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7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9월 들어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다.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신중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9월 17일 기소한 게 마지막이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김 전 사장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그쳐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도 개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6월 11일 경기도 남양주의 분양대행업체 1사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해당 업체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1차적인 규명 대상이었지만 박기춘 당시 민주당 의원이 1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첩보 내용을 염두에 둔 수사였다.

분양대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던 박기춘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8월 13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박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8일 구속됐다. 1사 대표 김도 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명품시계 등 총 3억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박 의원은 9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 ■ 포스코 비리 수사…협력사와 ‘검은 공생’ 적발, 정치권 유착도 확인

이 무렵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는 전환점을 맞았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협력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사례를 잇따라 적발했지만 좀처럼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진척을 보지 못했던 때였다.

검찰은 포항에 있는 제철소 설비 시공·정비업체인 티엠테크의 수주 비리에서 포스코 최고위층과 정치권의 유착 단서를 찾아냈다.

티엠테크는 2009년부터 포스코의 다른 협력사로 가야 할 일감을 집중 수주해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수사팀은 티엠테크의 실소유주 박모 씨가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지역사무소장을 지낸 측근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009년 포항의 신제강공장 건설이 정부의 고도제한 방침에 따라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던 포스코는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의 도움으로 건설을 재개할 수 있었다. 경영 악재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며, 검찰 수사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티엠테크 외에도 청소용역업체 E사를 비롯해 포스코로부터 특혜 수주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의 최고경영자였던 정준양 전 회장은 9~10월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 역시 10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이어 농협 비리에 칼날을 들이댔다. 자본잠식에 빠져 있던 리솜리조트가 농협으로부터 600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 불법이나 ‘검은 청탁’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서 수사는 출발했다.

검찰은 9월 25일 리솜리조트 신상수 회장을 농협으로부터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농협 고위 관계자가 로비를 받고 리솜리조트에 부당 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은 일단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

대신 수사는 농협 산하 기관과 협력업체 사이의 뒷돈 거래를 파헤치는 쪽으로 진행됐다.

협력사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 씨가 10월 5일 구속기소됐다.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 씨도 협력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월 8일 구속기소됐다.

거래 지위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협력사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행태는 다른 업체에서도 적발됐다. KT&G에 몇 건의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9월 16일 납품단가를 유지해 주는 대가로 인쇄업체 S사로부터 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KT&G 전 부사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10월 6일에는 S사로부터 협력업체 지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6억2천여만원을 챙긴 KT&G 신탄전제조장 생산실장 구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포스코 비리 수사는 10월 하순께 초창역에 다다랐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0월 29일 불구속기소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티엠테크 등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 3곳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였다. 이 전 의원과 측근들은 이런 특혜성 거래로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월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이 전 의원.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정권 실세들의 비호 속에 그룹 최고경영자에 등극한 과정 또한 드러났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009년 정 전 회장이 포스코 회장이 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영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컸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하반기에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후임으로 정 전 회장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이구택 당시 회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 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지지했고, 2009년 2월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 전 회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당시는 박 전 차관이 공직을 맡지 않았던 때였고 회장 선임을 둘러싼 금품거래 역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정치적 외압 덕분에 포스코의 수장이 된 정 전 회장은 재임 시절 방만 경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정 전 회장의 공

소사실에 포함됐다.

포스코 협력사의 비리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중앙종합건설이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포스코로부터 특혜수주한 혐의를 잡고 이 회사 배성로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11월 11일 발표했다. 정 전 회장과 이 전 회장, 배 전 회장 등 3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17명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외에 현역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와 유착한 단서가 포착되기도 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이 의원의 측근 업체에만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포스코 수사는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와 거래업체 사이의 '검은 공생'을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사 장기화'에 따른 비판에도 직면했다.

포스코 수사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비마다 수사 동력을 잃었다. 신속한 의혹 규명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수사가 8개월간 이어진 이유였다. 이는 수사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정 전 회장이나 이 전 의원 등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불구속 기소되고 그 아래에 있는 인물들만 엄벌에 처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 프로야구 선수가 포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포스코와 농협, KT&G 등 공공성이 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 범죄 수사가 이어지던 때 검찰의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폭력조직원들이 베트남 등지의 카지노를 빌려 한국인에게 도박을 시켜주는 이른바 '정킷(junket)방'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다. 도박장을 차려 놓고 판돈을 거래하는 일은 조폭이, 국내 기업인 등을 '해외 원정도박 고객'으로 유치하는 일은 브로커들이 맡는 구조였다.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춘(사망 당시 64세) 씨의 양아들 김모 씨도 이 사업에 가담했다.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단골 고객으로 화장품 업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0월 21일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에서 1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 광주시의 K골프장 소유주 맹모(87) 씨와 울산의 해운업체 K사 대표 문모(56) 씨 역시 10월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에 이목이 쏠린 것은 이 사건에 유명 스포츠선수가 연루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이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단서가 포착됐던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4천만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확인

했지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오승환과 임창용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정식 재판에 넘어갈 경우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점 등을 검찰은 감안했다. 당시 오승환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 ■ 방산비리 수사 1년여 만에 종결

12월 들어서면서 방산 비리 수사가 종결됐다. 군과 검찰의 합동 수사조직인 방산비리 합수단은 활동 기간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을 비롯, 육·해·공군에서 추진한 1조원대의 방위사업 부문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참담의장을 12월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충족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와일드캣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1996년 검찰이 육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을 구속수사한 이후 방산비리 피의자로 기소된 군 출신 인사 중에서는 최 전 의장이 최고위직이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증개한 업체 S사 대표 함모 씨도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2월 합수단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에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황 전 총장은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 비리를 밝혀내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이 터키로부터 1천여억원에 이 장비를 도입하는 거래를 증개한 일광공업 이규태 회장은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倍)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이 중 200여억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해군 정보함 사업, K-11 복합형 소총 납품 사업,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사업 등 여러 건의 방위사업에서 부정한 금품거래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비리가 적발됐다.

합수단은 구속 피의자 51명을 포함해 총 7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군인이 42명으로 가장 많다. 장성급 11명(현역 1명·예비역 10명)과 영관급 30명(현역 13명·예비역 17명), 기타 1명이다.

군인 중에서는 해군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군이 5명, 공군이 6명이었다. 방위사업청 등에 속한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은 25명이 기소됐다.

농협 비리와 KT&G 비리 수사로 12월에 일단락됐다.

검찰은 농협 관련 수사에서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

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농협 전·현직 임직원은 13명에 달했다. 특히 축산 분야의 비리 행태가 두드러졌다. 사료업체 등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뒷돈을 챙긴 농협 간부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다.

사료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챙긴 전직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 씨가 구속기소됐고,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원을 받은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됐다.

KT&G 비리 수사는 이 회사 민영진 전 사장이 12월 18일 구속되면서 정점을 찍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총 1억7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민 전 사장 외에도 협력사의 뒷돈을 받은 KT&G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한 KT&G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은 18명에 달했다.

검찰의 비리 수사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점도 노출됐다. 보고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수사기밀이 잘 지켜지지 않고, 대형 사건을 집중력 있게 수사할 만한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 ■ 김수남 총장 취임, ‘부패범죄 수사역량 강화’ 표명

12월 1일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패 범죄를 수사하려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 여·야 합의로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중수부 부활론’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중수부의 순기능을 되살릴 방안을 검토했다. 고민 끝에 태스크포스(TF) 형태의 비상설 수사조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검 중수부와 같은 상설조직은 아니지만 TF-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단순화한 보고체계로 수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었다. TF는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며, 수사에 집중력이 필요할 경우 전국 검찰청에서 정예 인력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연말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방산비리 합수단장이었던 김기동 검사장을 TF의 최종 책임자로 내정, 2016년 1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명명된 TF의 출범을 예고했다.

## 국 방

###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

#### ■ DMZ 지뢰 도발

북한은 2015년 8월 초 남북이 군사적으로 침체하게 대처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